

# 출장보고서

2023. 11. 28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 1 출장 목적

- OECD EPC(경제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 OECD EPC(경제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 경제 전망과 거시 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을 검토·평가,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
  - 논의된 결과는 OECD Economic Outlook으로 발간될 예정임.

## 2 출장 개요

-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프랑스 파리 OECD
  - 출장기간: '23년 11월 14일(화) ~ 11월 19일(일)(출·입국일 포함, 4박6일)
- 출장자 (총 1명)

소속	성명	직위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정대회	선임연구위원

## 3 출장 일정

일자	시간	주요 일정(안)
11.14(화)	12:10 ~ 18:30	인천공항 출발
		파리공항 도착
11.15(수)	10:00 ~ 18:00	출장단 사전회의
11.16(목) ~11.17(금)	10:00 ~ 19:00	OECD EPC 회의 참석 OECD 한국데스크 면담 및 간담회
11.18(토) ~11.19(일)	13:20 ~ 09:40	파리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 4 활동 내용

### 1.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 (16일)

#### I. 안건 주요내용

- 세계경제는 여전히 高 인플레이션과 低 성장 상황에 직면
  - 보다 긴축적인 금융 여건으로 부동산·금융업 등 금리 민감 산업 둔화세,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불확실성 증대
  - 헤드라인(Headline) 인플레이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락했으나, 근원(Core)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경직적
- 세계경제는 '23년 2.9% 성장 기록 후 '24년에는 2.7%로 하락, '25년 정책금리 인하와 함께 3%로 재반등 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 수준은 비용 압력이 완화된에 따라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G20 CPI 전망(%): ('23)6.1 ('24)5.5 ('25)3.6)
  - 선진국·신흥국 간 성장률 격차는 지속될 것이며, 북아메리카·아시아 주요국 대비 유럽 국가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를 둘러싼 주요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음.

- ① 세계 경제는 성장 회복 추세이나, 둔화 가능성 역시 노정
  - 러-우 전쟁 및 가파른 긴축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반등('22년 하반기 2.7% → '23년 상반기 3.1%)
  - 다만 최근 주요국의 PMI 지수 하락, 긴축에 따른 기업의 채무 상환 부담 심화 등 우려 요인 상존



- ②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하락, 근원 인플레이션 여전히 경직적
  - 기업의 마크업 보다는 임금 인상에 따른 단위 노동비용 상승이 서비스 물가 상승에 기여



- ③ 무역 규모 둔화 및 개방도 하락

□ 향후 경제전망에서 있어 주요한 리스크는 다음과 같음.

① 지정학적 갈등 격화

- 이스라엘-하마스 간 충돌로 단기 불확실성 증대, 현재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확진시\* 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 자극 가능성
- \* 기름·천연가스 가격 상승, 수에즈 운하 등 무역 경로 단절, 금융 시장 충격

② 국제 무역 회복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 최근의 국제 무역 감소는 구조적 현상으로 판단되어, 지속시 '24~25년 성장률 반등 전망이 약화될 우려
- 최근 긴축 통화 기조가 무역 관련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내수 중심 정책이 무역 침체를 장기화시킬 가능성

③ 긴축 통화정책의 영향

- 경직적인 근원물가 등으로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을 경우 실제 인플레이션 안정에 난항 가능성
-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 및 부동산 시장 악화, 고유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침체 리스크 존재
- 특히, 신흥국의 경우 외화표시채권 스프레드 증가, 자본 유출 증가 등에 따른 신용 등급 하락 등 금융 취약성 보다 심각

④ 중국 경기 침체 심화 우려

-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가 추가적인 금융 위기로 번질 우려  
→ 세계 경제 주요 동력 중국 침체로 글로벌 성장 둔화 가능성

⑤ 코로나 기간 초과 저축의 소비

- 코로나 기간 누적된 가계의 초과저축이 성공적으로 소비로 전환될 경우 성장률 상승·인플레이 하락 지연의 상방 리스크 존재

□ 이와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OECD는 다음과 같은 거시 경제 정책을 권고함.

① 통화정책 : 선진국의 긴축 기조 유지 필요

- 근원물가 압력이 확실히 낮아지기 전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 하되, 금융시장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확산 방지

② 재정정책 : 부채 적정성을 유지하되 새로운 우선순위에 대응

- 많은 국가에서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공공부채, '24~25년 고율 차환 발행으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  
→ 디지털화·녹색 전환 등 우선순위에 투입할 재정 확보를 위해 지출조절 및 세율조정 등 재정 여력 강화 조치 필요

③ 신흥국은 거시경제의 안전성 제고 필요

- 신흥국의 정부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만큼, 투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재정 프레임워크 재구축 필요
- \* 특히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정책이 원자재 가격과 분리되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④ 회복탄력성이 뒷받침된 무역 규모 확대 정책 필요

- 개별 공급 경로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붕괴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되, 무역 개방성 회복이 요구됨.

- 특히, 전세계 생산의 2/3를 차지하나 무역 규모는 1/4 미만인 서비스 분야의 무역 확대에 집중할 필요
- 한국경제는 '23년 1.4%, '24년 2.1%\* 성장 전망
  - \* 5월 EPC 대비 '23년 성장률 유지, '24년 성장률 하향 조정(△0.1%p)
  - 고금리, 실질임금 감소, 주택시장 부진으로 민간소비 및 투자 감소
  - 소비자물가는 8월에 에너지·식료품가격 상승으로 반등했으나, 근원물가는 안정세 지속하고, 노동시장은 높은 고용률, 낮은 실업률로 견조
  - 아팔 전쟁은 지금까지 영향이 제한적이었나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을 유발
- 거시 정책 기조는 여전히 타이트한 기조 유지
  - (통화정책) 현재 기준금리(3.5%)는 '24년까지 유지, 물가가 목표치인 2%에 근접하는 '25년에 2.5%로 하향 전망
  - (재정정책)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으나, 세수 감소로 '23년은 긴축 정도가 감소하고 '24년은 중립재정 전망
- 한국경제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23년 1.4%, '24년 2.1%, '25년 2.1%)
  - 반도체 수요 회복으로 수출 증가 예상되며, 소비자물가는 안정세 지속하며 '25년에 2% 목표 달성
  - 부채 상환 부담 및 고물가는 단기적으로는 소비·투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24년 후반기에 수요 회복 예상
  - 국제 금융시장 불안은 가계 부채상환 부담을 가중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 갈등은 한국 공급망 불안 요인

- 경제정책은 구조적 문제(Structural challenges)에 직면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미래 재정 소요 압력\*에 대비하여 재정준칙 등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
    - \* OECD 장기 전망 모델에 따르면 2040년에 GDP의 5% 소요
  - 유류세 인하 연장보다는 취약층 타게팅 지원을 권고, 시장 규제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구조적 노력 필요
    - \*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중소기업 지원 합리화 등
    - \*\*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확대 등

## II. 논의사항

- ①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은 대외여건 악화 기인한 것으로 판단
  - ❶ 30~40년만의 고물가 + 세계 각국 고강도 금융 긴축
    - \* 美 CPI(%) : ('81)10.3<오일쇼크> ('17)2.1 ('19)1.8 ('20)1.2 ('21)4.7 ('22)8.0<40년만에 최고>  
美 기준금리 : ('22.3월) 0.25% → (현재) 5.5%, 1년 반만에 20배 이상 급등
  - ❷ 세계교역 증가율 0%대 + 세계성장 위축 + 역대급 반도체 부진
    - \* 세계교역 증가율(% IMF) : ('17)5.6 ('18)4.0 ('19)1.2 ('20)△7.8 ('21)10.9 ('22)5.1 ('23\*)0.9  
세계 성장률(% IMF) : ('17)3.8 ('18)3.6 ('19)2.8 ('20)△2.8 ('21)6.3 ('22)3.5 ('23\*)3.0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금융위기('09년) 이후 최저 + 반도체 가격은 '19년(3.9\$)의 절반 이하(1.6\$)
  - ❸ 지난 수년간 국가채무·가계부채 급증하여 정책 여력 제약 있는 상황
    - \* 국가채무(조원) : ('17)660 → ('22<sup>12</sup>)1,076(+416조원) / 가계부채(조원) : ('17.1/4)1,359 → ('22.1/4)1,863(+504조원)
- ② 최근 지표 개선세 뚜렷하게 나타나 당초 예상된 1.4% 성장 전망
  - 3/4분기 성장 시장예상 상회+9월 산할 큰 폭 증가+10월 수출 (+)전환(13개월만)
    - \* 분기별 성장률(%) : [전기비] ('22.4/4)△0.3 ('23.1/4) 0.3 (2/4) 0.6 (3/4) 0.6 <시장 예상 0.4~0.5%>  
[전년동기비] ('22.4/4) 1.4 ('23.1/4) 0.9 (2/4) 0.9 (3/4) 1.4 <시장 예상 1.1~1.2%>
    - \* 9월산할(전월비, %) : (전산업)+1.1(광공업)+1.8 (서비스업)+0.4(소매판매)+0.2 (설비투자)+8.7 (건설투자)+2.5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 2개월 연속 생산 4대 부문 모두 증가

\* 수출증가율(%) : (23.7)△16.1 (8)△8.1 (9)△4.4 (10)+5.1 <무역수지(+16.4억달러는 5개월 연속 흑자)>

○ 연간 1.4% 내외에서 등락 예상(낙관적으로는 1.5%, 불확실성 확대 시 1.3%)

\* 4/4분기 0.7% 시 연 1.4% 0.3%여도 1.3%→상저하고 확실 피치 전망 연 1.0%(4/4분기 △0.5%미만 불가능)

③ 現 경제상황은 저점 지나 회복 초입기, 하반기~내년 회복세 강화

\* 성장률(전년동기비<전기비>, %) : (23.1/4)0.9<0.3> (2/4)0.9<0.6> (3/4)1.4<0.6> (4/4)2.3~2.5<0.7~0.9> (24)2.2

④ 잠재성장률 하락('23~'24년 잠재성장률 1%대)은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수년간 누적된 결과

\* 잠재GDP(%) : [OECD] ('16~'20) 2.6 → ('21) 2.2 ('22) 2.0 ('23) 1.9 ('24) 1.7  
[한은] ('16~'20) 2.5~2.7 → ('21~'22) 2내외

○ 주요국 대비 과도한 규제 + 노동시장 경직성 → 생산성 저하 +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 노동시장 경쟁력 141개국중 51위, 노사협력 순위 130위 (WEF, '19년)

\* 총요소생산성(미국 = 100 기준) : (獨) 92.7 (佛) 90.9 (英) 78.7 (日) 65.6 (韓) 61.4

## 2. Developments in Individual OECD and Selected Non-Member Economies

### 1. 안건 주요내용

#### 미국

□ 미국 경제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strong pace) 성장세를 보이면서 성장경로가 이전 경로를 상당 폭 상회

○ 견조한 소비 증가에 힘입어 3/4분기 GDP 성장률이 4.9%(전기대비연율)를 기록

▪ 제조업구축물 투자도 급증하면서 향후 제조업 생산 및 고용증가가 기대되나, 노동시장은 수급불균형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

○ 인플레이션은 유가상승, 견조한 소비 증가 등으로 둔화 속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고금리 장기화<sup>higher for longer</sup> 기대가 강화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3.1월 6.4% → 3월 5.0% → 6월 3.0% → 9월 3.7%  
(근원소비자물가) : 23.1월 5.6% → 3월 5.6% → 6월 4.8% → 9월 4.1%

□ 앞으로 미국 경제는 긴축적인 금융 및 신용여건으로 인해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상·하방 리스크가 병존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상방리스크로는 양호한 고용시장과 초과저축을 바탕으로 견조한 소비증가세 지속, 산업정책 효과가 지속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부문이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

○ 하방리스크로는 취약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의 금융불안 심화, 24년 예산안 통과 난항,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의 영향, 재정적자 지속 및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정부 이자부담 증가, 대선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잠재

○ 한편, 금융여건이 보다 긴축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최종금리 수준은 비슷하나 긴축기조가 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

## 중국

- 중국 경제는 리오프닝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대외수요 부진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3/4분기 들어서는 정부 부양조치 등에 힘입어 소비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 3/4분기 GDP 성장률이 1.3%(전기대비)를 기록하여 전분기(0.5%)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확대
    - \* 중국 성장률 YoY : 23.1분기 4.5% → 2분기 6.3% → 3분기 4.9%  
(qoq) (2.3%) → (0.5%) → (1.3%)
  - 부동산경기 부진에 대응하여 부양조치를 도입하고 재정 및 통화정책도 추가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소비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다만 부동산경기는 부진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개발기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가격 하락과 지난해 하반기 제로코로나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낮은 수준(8월 0.1% → 9월 0.0% → 10월  $\Delta$ 0.2%)을 지속
- 향후 중국경제는 정부의 부양조치 등에 힘입어 회복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부동산부문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그 속도는 완만할 전망
  - 중국정부의 추가 부양조치, IT 등 글로벌 재화수요 회복 등이 회복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부동산 개발기업 디폴트 리스크 확대, 미·중갈등 등으로 인한 교역여건 악화 등은 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

## 일본

- 최근 일본경제는 상반기 중 팬트업 수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3분기 들어서는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
  - 양호한 소비와 함께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회복세가 약화되고 제조업과 설비투자도 다소 부진
  -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하락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근원물가는 명목임금 상승, 기업의 비용전가 강화에 영향받으며 높은 오름세를 지속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3.1월 4.3% → 3월 3.2% → 6월 3.3% → 9월 2.8%  
(신선식품에너지제외) : 1월 3.2% → 3월 3.8% → 6월 4.2% → 9월 4.2%
- 향후 일본경제는 장기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경제성장률(IMF, 23.10월) : 22년 1.0% → 23년<sup>e</sup> 2.0% → 24년<sup>e</sup> 1.0%
  - 팬트업 효과가 약화되면서 금년보다 성장세는 둔화되겠지만, 정부의 감세, 임금인상 정책 등으로 실질소득이 제고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영향 등에 힘입어 투자도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II. 논의사항

- 미국 경제가 점차 둔화되겠으나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둔화속도가 감소하면서 연준의 고금리 지속 기대가 강화되고 있으며, 재정수요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로 장기금리도 상승
  - 미국의 고금리는 여타국으로 파급되면서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실물경제의 둔화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글로벌 금융·경제 여건에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중국 경제는 정부의 부양조치 등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부동산부문 부진 외에 PMI 등 주요 생산지표도 다시 약화되는 모습임.
  - 대외교역 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부문 부진이 장기화되거나 강화될 경우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
- 최근 일본은 양호한 성장세와 함께 물가 오름세도 과거 평균에 비해 상당폭 높은 3%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일본은행이 그간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이 경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국채에 대규모로 투자되어 있는 일본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환류되면서 글로벌 국채 시장과 여타 금융시장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3. A focus on preparing public finances for future challenges: short, medium and longer-term considerations

### I. 안건 주요내용

- 높은 부채 수준, 고금리, 고령화, 기후 전환 및 국방비 등으로 재정관리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 장기간 지속된 대규모 정부부채 감축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장기·대규모 부채 감축 사례는 1970년대 이후 총 34번으로, 평균 9년의 기간 중 부채비율(GDP 대비)을 27%p 감축
  - 부채 감축(GDP 대비) 규모는 크게 '기초수지(GDP 대비)',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이자율과 성장률 간 격차)'로 분해하였고, 기초수지는 지출과 수입 요인으로 분해
- 부채 감축은 대부분 사례에서 기초수지 흑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눈덩이 효과는 부채 감축에 긍정적인 기여
  - 3개의 사례를 제외하면 기초수지는 평균적으로 흑자를 기록
    - \* 기초수지의 흑자는 대부분 사례(80%)에서 지출 감소를 통해 이루어짐.
    - \* 지출의 경우, 교육, 건강, 가족, 유아 등 성장 및 평등 친화적 지출은 연금, 비교육·비건강 보수 및 정부 소비 등에 비해 유지되었으나, 보조금, 실업, 질병 및 장애 수당 등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됨.
    - \* 수입의 경우 법인세수가 대부분의 사례(90%)에서 증가하였으며 기초 수입 개선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나, 간접 및 재산세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작음.
  - 한편, 2/3의 사례에서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한편, 실질 이자율은 작은 양의 값이거나 혹은 음의 값을 가져 눈덩이 효과는 부채 감축에 긍정적인 기여

- 과거 사례는 성장을 저해하는 지출 감축으로 대규모 부채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지출 감축 고려 시에는 선별성 강화와 지출 프로그램 효율화가 중요
  - 이자율이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눈덩이 효과에 따른 부채 감축을 기대하기 힘들고(Arslanalp and Eichengreen, 2023), 공공투자 수요 증가로 지출 제한도 어려운 상황이나,
  -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특정한 보조금과 이전지출 등 성장을 저해하는 지출을 감축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지출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각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고려하여, 선별성을 강화하고 지출 프로그램을 재설계하여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II. 논의사항

- 재정건전성 관리의 측면에서 향후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부채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포함.
- 기초수지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을 저해'하는 지출 축소라는 점에 동의하는데,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어떠한 지출이 성장을 저해하는 지출인지? 이와 같은 지출 축소를 통해 성장률은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상승하였는지? 아울러, 지출 축소는 구조개혁 정책과 연관이 있었는지?
- 한편, 한국의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등은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우려
-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일례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연동비율로 정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필요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구조를 개편

#### 4.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ies: Policy considerations in the current context

##### 1. 안건 주요내용

□ 각국은 친환경 산업 촉진, 외교안보, 지역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산업정책을 시행 중

○ 산업정책은 국익과 타국에 대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지만, 경쟁제한 및 보호주의 강화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야기할 수도 있음

##### [정책 고려사항]

① 산업정책은 ①시장실패 교정, ②외교안보 강화, ③지역간 균형 발전, ④ 연계산업 발전, ⑤초기 산업 보호 및 육성 등을 통해 사회후생 유발

- 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미반영
- ② 경제의 지나친 해외의존도(무역, 투자 등)는 지정학적 갈등에 취약
- ③ 지역간, 인구계층간 지나친 임금·고용 격차는 사회적 불안 야기
- ④ 전기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충전인프라 및 전기설비 공급 선행 필요
- ⑤ 산업이 충분히 성숙되어 노하우 축적,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해야 함

② 산업정책은 효율성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정당화되어야 함

③ 특정 산업정책의 장·단은 정책목표에 따라 상이하며, 정부는 개입 비용이 적고 시장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에만 개입하여야 함

④ 산업정책 수단은 민·관 협력, 일반 경영 여건 개선과 특정 산업 지원의 균형, 그리고 사회 및 환경 목표 등을 고려해 선정되어야 함

⑤ 증거기반 산업정책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

- ① 무제한적 지원보다는 지원 갱신 시에 입증 책임을 부여여하는 자동 일몰제 등을 적용하여 남용 위험 통제
- ② 지원 대상의 선정은 사업의 기술적 평가가 가능한 전문성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추천

⑥ 상대국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은 ①예상되는 효과, ②보복조치의 이익/비용, ③경제규모·예산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될 필요

\* 최근 선진국은 美 반도체법·IRA법에 대응하여 유사 정책으로 대응 중(보조금 경쟁 우려)

① 비교우위에 영향을 주는 차별적 조치에만 보복조치 정당화 가능 (기본적으로 보조금 경쟁은 과잉 자본투자 등 비효율을 야기하기 때문)

\* 소비·R&D 보조금(공정적 파급효과) 등 비차별적 조치에는 원칙적으로 보복조치 정당화 불가

② 보복조치에 따른 국내 산업·소비자 피해, 정책목적 달성 여부 고려 필요

\*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보복조치 → 국내 산업영향 미미, 소비자 피해↑(값싼 수입품 구매 불가)

③ 경제규모\* 및 예산 여력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잘 설정할 필요

\* 소국의 경우 대국의 산업정책 모방보다는 공급망 내 보완재 중심으로 비교우위를 축적하는 전략이 적절

##### [한국]

① 20.7월, 글로벌 공급망 개편에 따라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향후 5년간 1.5조원(GDP의 0.07%)을 R&D, 스마트공장 지원, 회사 이전 등 지원

② 23년 초, 美 IRA에 대응해 전기차 공급망 지원을 위해 7조원(GDP 0.3%)을 IRA 세제혜택 조건 충족을 위한 공급망 탈중국화 지원에, 2030년까지 20조원(GDP 0.9%)을 배터리 기술개발에 지원

## [미국]

- ① (CHIPS and Science Act) 향후 5년간 약 530억 달러(GDP의 0.2%)를 STEM 분야의 R&D·인력개발 등에 지원, '27년 이전 시작된 플랜트 구축에 대해 25% 세액 공제(10년간 약 243억 달러 소요) 등 추진
  - 한편, 자금 지원 및 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기업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반도체 공정을 확장하는 것을 10년간 금지
- ② (IRA)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저장 기술에 대한 생산·투자세액 공제, 전기·수소 자동차(북미 조립 등 요건 충족시) 구매시 최대 7,500\$ 세액 공제 등 향후 10년간 2,710억 달러(GDP의 1.1%) 지원

## [일본]

- ① ('20년)6,120억엔(GDP의 0.1%)을 투입하여 생산시설의 동남아 이전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 촉진 프로그램 추진 및 ('21년)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국내 개발·생산을 위한 '반도체 및 디지털 산업 전략' 수립
- ② ('22.5월)중요 제품의 안정적 공급, 보안 관련 발명의 기밀 유지 등 '경제 보안 촉진법' 제정, ('22.12월)녹색전환(GX) 채권을 통해 10년간 150조엔(GDP의 27%)의 민간·공공투자 지원 등 'GX 정책 기본계획' 발표

## [중국]

- ① '5개년 계획',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06년)' 등 하향식 산업 계획을 지속 추진 → '15년 이후 'Made in China 2025'를 통해 IT·로봇·반도체 등 10대 분야를 특정하여 기술격차 극복을 적극 지원
- ② 특히,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세액공제 외에도 업스트림 산업 지원을 통한 저렴한 원자재 공급, 국유은행의 적극적 대출, R&D·수출 보조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국유 대기업 중심의 강력한 지원

## [EU]

- ① '20년, 유럽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유럽 신산업 전략' 발표 → '23년, 'EU CHIPS'를 제정하여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달성(~'30년)을 위한 430억 유로(GDP의 0.3%) 자금 투입 등 추진
- ② 독일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200억 유로(GDP의 0.5%), 탈탄소를 위한 기후전환 기금 2,120억 유로('24~'27년, GDP의 5.5%) 투입 등을 비롯한 프랑스·이탈리아 등 각국의 개별 지원도 병행

## II. 논의사항

- 산업정책이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은 분석수단 중 하나로 예비타당성조사(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를 활용
  - 다만, 경제적 타당성, 지역 균형발전 등의 목표는 상호충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정치적·경제학적으로 어려운 일
  - ☞ 경제적 타당성과 지역 균형발전이 양립(compatible)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 필요

## 5. International trade: recent patterns, spillovers

### 1. 안건 주요내용

- 금년 중 세계교역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고금리 지속 등 경기적 요인 외에 교역여건의 구조적 변화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전년대비, %)	2022	23	24	2010~19
■ 세계교역신장률(IMF)	5.1	0.9	3.5	4.6

⇒ 세계교역 여건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

- 글로벌 교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화의 진전과 효율적인 국제분업을 기반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생산비용 상승과 선진국의 저성장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 이어 최근(2020년 이후) 들어서는 팬데믹과 전쟁을 거치면서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고 지정학적 분절화가 빠르게 진행

- ① (무역장벽 확대) 보호무역 이슈가 관세·비관세장벽과 같은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등 비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무역규제가 크게 증가
- ② (지정학적 분절화) 기업의 해외투자 및 무역 활동에 경제 펀더멘털 외에 지정학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각국의 FDI 및 수출입 구조\*가 분절화

\* 팬데믹 이후 미국의 수입에서 대중국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중국의 경우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각국의 FDI도 Reshoring, Friendshoring이 진행중(IMF, 2023.4월)

- 한편, 미·중간 직접무역은 둔화되었으나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간접 무역을 통한 교역관계는 지속되는 등 최근의 교역패턴의 변화는

단절이라기보다 재편 또는 재구성(reshuffling)으로 평가 가능

- ③ (중국의 GVC내 역할 변화)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으나, 임금 등 생산비용의 상승과 첨단산업 육성 정책 추진 등으로 생산거점 기능은 약화되고 핵심 원자재·중간재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은 공고해졌음.

- 교역환경 여건 변화를 지정학적 분절화 중심으로 모형\*을 통해 살펴보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수출 다변화는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간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일반균형모형(Antras·Chor, 2018)을 활용하여 교역비용(trade cost)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시나리오는 글로벌 교역 분절화 정도에 따라 3가지를 설정

- ① (제한적 분절화) 미국·EU가 산업·무역정책 등을 통해 각각 전기(반도체 등) 및 운송장비(자동차 등) 산업의 자급률을 제고
- ② (분절화 심화) 주요국들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내에서도 보호무역조치가 시행
- ③ (블록간 분절화 심화, 블록내 무역장벽 완화)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지만 블록내 장벽은 완화

- 여타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분절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지만 이와 동시에 다변화에 따른 이득도 큰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 및 글로벌 수출에 대한 영향은 분절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

- ① (제한적 분절화) 주요 선진국이 산업정책 등을 통해 첨단 산업(반도체 등 전기, 자동차 등 운송장비)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할 경우 우리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내외 감소하여 글로벌 수출(약 2%) 감소폭을 상회

② (분절화 심화) 블록간뿐 아니라 블록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이 약 10% 줄어들고 글로벌 수출은 4%내외 감소

③ (블록간 분절화 심화, 블록내 무역장벽 완화) 블록간 분절화가 심화되면서도 블록내 장벽은 완화되는 경우 우리 수출은 3%중반, 글로벌 수출은 2%중반 감소하면서 분절화 심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상당폭 완화

## II. 논의사항

- 앞으로도 세계교역은 글로벌 분절화 흐름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세계교역은 내년부터는 금년도의 부진을 딛고 점차 반등하겠으나 과거 평균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교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던 시기와는 구조적으로 달라졌음에 따라 세계 각국에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의미
    - 우리 수출은 여전히 일부 국가 및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수입의 경우도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자재의 대중 의존도가 큰 상황
- ⇒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6. Report by the Chair of WP1 (17일)

### I. 안건 주요내용

- WP1 회의(23.10.19~20)에서는 다음의 7개 아젠다에 대해 논의
  - ① 기후변화 완화 전략 정의 및 업데이트 - 클러스터 기반 평가 (Identifying and track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strategies - A cluster-based assessment)
    - 2000~2020년중 50개 국가(120개 이상 정책수단)가 채택한 기후변화 완화 전략을 4개 클러스터로 분석
      - 클러스터 1 :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적용 범위, 낮은 엄격성
      - 클러스터 2 : 보다 다양한 정책수단 사용(풍부한 세금정책, 일부 비균질적인 시장기반 정책수단)
      - 클러스터 3 : 복수의 정책수단 사용(상당히 엄격한 배출권 거래제 및 적당한 공급 관제)
      - 클러스터 4 : 가장 다양한 정책 조합 및 정책(현재)
    - 회귀분석 결과 탄소배출은 국가 기후변화 완화 정책의 엄격성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정책 조합이 있을 시 시너지 효과를 냄
    - 정책 조합과 그의 시너지 효과, 정책 조합이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특성화하는 것이 중요
      - 동 보고서는 정책 조합이 야기하는 경제적 효과(GDP, 생산성, 투자, 탄소배출, 경제적 비용 등)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출발점을 제시
  - ② 녹색 이행에 있어 기업 재정·관리 역량의 역할 (Making the grass greener : the role of firm financial and managerial capacity in paving the green transition)
    - 기업의 녹색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을 기업 역량을 중심으로 분석
      -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진척률은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함

- 대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간 분석에 따르면, ①자금조달 제약, ②녹색경영 실무 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녹색기술에 투자할 가능성이 감소하여 탄소배출 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시장기반 환경정책이 엄격할 경우 자금조달 제약의 부정적 영향은 사라지는 경향\*
- \* 이는 탄소가격 상승이 녹색투자의 상대적 수익률을 변경하여 녹색기술 투자 인센티브를 조성하는 데 기인하며, 녹색투자는 타 유형 투자보다 자금조달 제약에 탄력적

③ 녹색 이행의 길을 잃다? 측정부터 정형화된 사실까지  
(Lost in the green transition? From measurement to stylized facts)

- 일부 EU 국가의 환경 오염 수준, 오염도가 높은 일자리의 발생률·지리적 분포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정형화된 사실을 제시
- ‘녹색직업’ 및 ‘갈색(높은 환경 오염도)직업’을 분류하는 방법론을 제시\*
  - \* 전자는 직무에 따라, 후자는 환경 오염도가 높은 산업의 일자리 보급률에 따라 식별
  - 녹색 직업은 고학력자에게, 갈색 일자리는 교육수준이 낮거나 농촌지역 거주 근로자에게 더 흔하며, 녹색과 갈색 직업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음
  - 실업자는 실업상태에서 갈색 직업보다는 녹색 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친환경 직업으로 이동 가능성이 낮고 친환경적 이지도 오염도가 높지도 않은 직업으로 이동 가능성이 더 높음
  - 갈색 직업 종사자가 녹색 직업 종사자보다 실직할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더 높지 않음
- 본 연구 결과는 녹색 일자리 확대 촉진, 오염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해고되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정책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동기 부여

④ 생산성 향상 회복 : 정책 검토  
(Reviving Productivity Growth : A review of policies)

-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이 생산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 OECD 회원국의 잠재성장률이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바, 생산성 증가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생활수준 개선에 중요

표1. 생산성 향상 회복을 위한 정책 체계

	유인	생산요소		
		다요소생산성	자본	노동
기업 생산성 (프론티어)	혁신을 위해	기본 연구	고위험 투자	인적자본
기업 생산성 (후방)	양자결연, 실험을 위해	지식 확산	민간 투자/공공 사회기반시설	
기업간 자원 재분배	건전한 비즈니스 역동성을 위해			유동성

- ⑤ 참고 사항 : 보다 정확·시의적절·세분화된 제품 수준의 탄소 집약도 측정 기준  
(A scoping note: Towards more accurate, timely, and granular product-level carbon intensity metrics)
- 탄소 집약도 지표는 정부, 가계 및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 단, 현재 가용한 것보다 시의적절하고 비교 가능한 탄소 집약도 지표를 개발할 필요
  - 부문별 지표(sector-level metrics)는 비교적 잘 설정되어 있으나 무시할 수 없는 시차가 있으며, 정책 개입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종합적
  - 제품별 지표(product-level metrics)는 방법론, 데이터 수집 및 공유 관련 문제로 미완성
- 제품별 지표 산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이니셔티브의 잠재력을 강조
  - 단, 경쟁 접근방식 확산에 따른 분절화 위험이 있는바, 공공 및 민간부문은 기술 및 운영의 상호운용성 보장 접근 방식 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

⑥ 교육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거시경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측정

(Quantifying the effect of policies to promote educational performance on macroeconomic productivity)

- 교육정책과 시험 점수 간 관계를 정량화\*한 결과, 조기 아동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의 중요성이 강조

\* OECD 2018년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자료를 사용

- ECEC의 3~5세 아동 적용 범위가 10%p 증가할 경우 장기 총생산성이 0.5% 증가

- 학생당 교육비 지출과 시험 점수 간에는 교육비 지출 수준이 OECD 중앙값 이하일 때만 긍정적 연관성이 존재

\* 지출이 가장 낮은 OECD 국가의 경우 최대 4~5%의 장기 생산성 향상 가능

- 아울러 석사학위 소지 교사 비율과 PISA 점수 간 양의 상관관계 존재

- 능력에 따른 학생 그룹화, 유급 등의 정책은 개인 수준에서는 중요한 영향, 국가 수준에서는 효과 적음

- 소득 불평등과 같은 불리한 사회경제적 가족 배경은 학생 성과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

\* 가장 높은 불평등 수준을 OECD 중앙값으로 낮추면 장기 총생산성 약 4~6% 증가

⑦ 더 나은 주택정책에 대한 권고안 초안

(Draft Recommendation on Better Housing Policies)

- 주택의 경제, 재정, 환경, 사회, 세금 및 거버넌스 측면을 통합된 프레임워크로 통합, 이 분야 전반에 걸쳐 관련성을 설명하고 다양한 개발 수준의 국가와 관련된 권고안을 제공하고자 함

- 권고안 개발 시 ①OECD의 글로벌 표준 제정자로서의 임무 강화, ②주택관련 정책 분석 및 자문에 있어 OECD의 일관성을 함양, ③ 비회원국을 OECD 표준에 부합하도록 초청, 영향력을 확대 가능

- 일부 회원국은 권고안의 필요성에 의문 제시, 권고안 구현 및 모니터링의 어려움, 중앙정부의 권고안 구현 및 책임에 대한 우려를 언급

II. 논의사항

- EPC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현재 정책입안자들이 당면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검토 분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함

- 아울러 회의에서 논의되는 새롭게 구축된 데이터 및 분석방법론 등은 회원국들의 경제 분석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됨

- 다만, 회원국들이 여러 보완사항을 지적한 만큼, 향후 보완사항을 반영한 연구 진행 결과(또는 계획)가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될 필요

## 7. Reviving productivity growth in light of upcoming technological disruptions

### I. 안건 주요내용

- 고령화, 교육투자 생산성 저하, 높은 부채비율 등으로 경제성장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생산성 향상 정책 관련 그간 연구들을 살펴보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
  - 상흔효과(scarring effect)와 디지털화의 가속화 등으로 코로나 19가 생산성에 미치는 장기 효과는 여전히 불확실
  - 지정학 및 기후 위험, 경쟁 약화 및 세계화 지연 등은 잠재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작용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은 생산성 향상 기회이나, 그 결과는 정책에 따라 좌우될 전망
- 기업 간 생산성 격차, 역동성 및 시장 규제 등 중심으로 생산성 동인(drivers)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었으며, 향후 첨단기술, 고령화, 경쟁정책 및 녹색전환 등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
  -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광범위한 원칙을 제시할 수 있음.
    - 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에는 기업·근로자의 인센티브와 역량을 모두 개선시킬 수 있는 다축(multi-pillar) 접근법이 필요
    - ② 구조개혁 정책은 기술 선도 기업과 후발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영해야 함.
    - ③ 생산적인 자원(자본, 노동력) 배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비즈니스 역동성(dynamism) 향상을 특히 고려해야 함.
  - 급변하는 기술 및 경제환경 변화는 아래와 같은 정책분야에 집중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 \* 녹색 전환 및 급격히 발전하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ex. AI) 등 긴급한 이슈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의 투자와 혁신 촉진
- \* 디지털 전환기에 적절한 재교육(reskilling)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인적 자본 향상
- \* 혁신과 지식 흐름(innovation and knowledge flows)을 위한 개방적인 국제 시장 보존

- 위와 같은 정책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및 정책 분석을 시도할 필요

- \*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생산성에 대한 역할
- \* 인구통계학적 변화(ex. 고령화) 등 인적 자본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
- \* 경쟁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
- \*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의 녹색 전환 지원 방안

### II. 논의사항

-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구조개혁은 향후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구조개혁 정책이 거시경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는 아직 부재한 상황으로 파악됨.
  - 기술투자, 노동 및 상품시장 규제, 기업 역동성, 격차 등이 개별적으로 기업 수준 및 거시경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그 동안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 현실적으로는 이 모든 구조적 사안들이 오랫동안 서로 상호작용으로 얽혀 있어 개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구조적 문제점들 간의 상호 연관관계와 그와 같은 관계의 주요 요인(혹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